

사드 배치와 중국의 대한국 강압외교 동인*

김진용**

요약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를 추진한 후 중국은 한·중 우호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보복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중국은 전략적·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을 잃을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 한·중관계가 현상유지였다면 전략적으로 동북아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세력균형이 깨지고 세력전이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컸다. 이는 중국에게 전략적 이익인 셈이다. 또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자국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 지도부는 무엇 때문에 대한국 강압외교를 전개한 것일까? 이 연구는 상기 질문을 기반으로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강압외교 동인을 핵심이익의 침해, 역내 패권 약화, 중국식 국제질서 차원에서 규명했다.

주제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중관계, 중국외교정책, 강압외교, 핵심이익

* 이 연구결과물은 2017학년도 경남대학교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세심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회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conan@uok.ac.kr

I. 머리말

2012년 말 시진핑 지도부 출범 후 가장 가시적인 대한민국 외교 성과를 꼽는다면, 단연 한·중 수교 후 유례없이 긴밀해진 양국관계다. 그간 양국이 역대 최상의 밀월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①지리적 인접성, ②역사적 동질성, ③경제적 상호보완성, ④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서진영 2017). 2000년대 중국이 부강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미·일이 쇠퇴하며 동북아 지역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역내 주도권 장악을 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동아시아 전략 불균형을 우려했기에,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戰略的協力同伴者關係) 그 자체만으로도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¹⁾

하지만 중국은 2016년 1월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 배치 논의 후, 일방적으로 양국 우호 관계를 파기했으며 공세적 갈등으로 확대해왔다. 그 결과 중국은 오랜 기간 쌓아뒀던 한국의 신뢰를 상실해 전략적·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을 잃을 상황에 직면했다. 급기야 중국은 2017년 3월 30일, "절대 말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군사 대응까지 시사했다. 실제 중국 지도부는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을 통해 중국의 전략과 안보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계획 수립을 강조해왔다(Haggard 2017).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중국 지도부가 국제 정치·경제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음을 인지함에도, 적대적 대한민국 정책을 고수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1)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戰略的協力同伴者關係)란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사회 분야의 상호 협력은 물론이고 군사, 안보까지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

Organization) 회원국인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국이기 때문에 경제적 상호의존도(Interdependence)가 매우 높아 중국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은 자국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관점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은 양국 간 갈등 가능성을 완화한다. 국가 간 갈등 상황일지라도, 충돌 비용이 매우 높아 경제 협력이 오히려 득이 되기 때문이다(Papayouanou 1997, 113-140). 자유주의(Liberalism) 시각 역시 중국 중심의 상호의존은 아시아에서 양자 동맹의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평화적으로 다자 안보와 정치 협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Snyder 2009, 10-11).²⁾

이처럼 한·중 간 협력의 실익이 있음에도,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추진 이후 경제 제재를 가하며 양국 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또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묵인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과 미·일 동맹의 연결고리를 약화할 수 있었지만, 한국을 경제적으로 강압함으로써 중국 중심으로 집중된 경제적 상호의존이 오히려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주변국에 드러냈다. 그렇다면 한·중 갈등을 무릅쓰고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얻는 중국의 실익은 무엇일까?

현실주의자(Realist)에 따르면, 상호의존 관계에서 국가는 타국의 비용으로 자신의 힘을 팽창하려 하므로 군사 갈등 가능성을 높인다고 본다. 국가는 생존(Survival)과 힘(Power)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일 뿐, 경제 협력은 국가의 힘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이런 면에서 중국은 부유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파괴를 원하는 것으로 귀결된다(Snyder 2009, 9-11). 즉 한·중 현상유지(Status Quo) 자체만으로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 중·미 간 형성됐던 세력균형을 깨고 세력전이를 가속할 수 있

2) 실제 중국은 양자 외교를 선호하지만, 지속적으로 다자 외교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강대국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자 기구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때때로 다자주의를 통해 힘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Sutter 2005, 70).

어, 역내 주도권 확보를 원하는 자국에 전략적 이익인 셈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악화가 중국의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실익이 없음에도 중국 지도부는 무엇 때문에 대한국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를 전개하는 것일까? 시진핑 지도부의 인식 오류에서 비롯된 대외정책일까?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온 중국 외교정책의 특성상 한·중 관계 공고화 단계에서 발견되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 것일까? 과연 한국의 사드 배치가 사회주의권을 지켜야한다는 국제적 의무감으로 참전한 6.25와 베트남 화교 안전을 명목으로 일으킨 중·월 전쟁처럼 중국의 손익을 떠나 중국 공산당의 명분을 앞세우며 감행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 연구는 상기 질문을 기반으로 중국이 전략적·경제적 협력자였던 한국을 잃을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강압외교를 전개한 동인이 무엇인지 규명했다. 우선 2장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위협 인식을 전략적·기술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중국의 대한국 경제 제재가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점을 규명했다. 이어 3장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실질적 동인을 국가이익 침해 여부,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 약화, 중국식 규범 위배를 적용해 규명했다. 이어서 결론을 도출했다.

II. 사드에 대한 중국의 위협 인식과 경제적 손실

1.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위협인가?

강대국은 국제 체제의 균형 유지를 위해 동맹하지만, 약소국은 자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동맹을 체결한다(Rothstein 1988, 21). 그간 한국은 북한 핵문제로 인해 안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미국과 전략적 동맹을 강화해왔다. 이런 면에서 사드 문제로 파생된

한·중 관계 악화는 느슨해진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알트펠드(Altfeld 1984, 528)의 자율성 안보 교환 이론에 따르면 약소국은 동맹을 통해 안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자국의 경제력을 증대할 수 있지만, 강대국에 대한 자율성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처럼 한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안보 자율성과 그 비용을 교환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동북아 지역의 세력전이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아편전쟁(1840-1842년) 이전 세계 최강국의 위상 회복을 원하고 있다(Dzodin, 2017). 하지만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 강화를 야기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간 중국은 역내에서 한·미·일 결속 약화를 원했고,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머무는 자체만으로도 세력전이가 유지돼 동북아 지역의 주도권을 회복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한국의 사드 배치 추진으로 파생된 한·중 갈등은 한·미·일 군사 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또 한·중 갈등은 세력전이 측면에서 미국의 쇠퇴가 늦춰짐은 물론 중국의 부상을 저지할 수 있기에 중국의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사드를 매개로 한국과 갈등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사드 갈등이 지속되면 세력전이가 늦춰져 동북아 지역의 부상이 저지될 수 있음에도 전략적 위협 때문에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일까?

중국의 사드 우려에 대해, 덴마크(Denmark 2017)는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라는 일차적 임무만 수행하며 사드 레이더의 대중국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이 중국 측 주장처럼 뛰어나지 않다고 반박한다. 또 미국은 이미 동아시아의 괌(Guam)에 한 기, 일본에 두 기의 사드를 배치했다. 특히 일본에 배치된 X-band 레이더는 한국의 그린 파인 레이더(Green Pine Radar)보다 정교한 모니터링 능력을 갖춰 효율적으로

방어체계가 작동되고 있다(Liu 2015, 141).

이런 사실을 중국 지도부가 인지했음에도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민감한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 동일 권역인 괌과 일본의 사드 배치에 별다른 반응을 표출하지 않고, 오직 한국만 위협적이라는 주장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실질적 전략 위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또 중국이 사드 레이더를 우려했다면, 여기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미국에 요구하고 논의했을 것이다(Denmark 2017). 한국의 사드 배치 논의 후, 미국은 중국의 우려를 누그러트리기 위해 지속해서 사드 레이더의 기술적 브리핑을 제안했지만, 중국은 완강히 거부해왔다. 그러다 2016년 3월에 이르러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탱하는 중국의 전략적 이슈임을 자인했다(PRC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6/03/30).

기실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전략 능력을 일정 정도 상쇄할 뿐이다(Wu 2013, 29-52). 이에 대해 리우(Liu 2015, 139)는 한국에 AN/TPY-2 레이더가 배치될 때 중국 해군에 억지력(Deterrent)을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중국은 해군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지상 전력으로 해상을 보호해왔다. 중국의 동해 연안은 남한으로부터 겨우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남한의 AN/TPY-2 레이더가 이 지역을 탐지해 레이더 추적 데이터를 더 빨리 전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중일 충돌 시 중국의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이처럼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아님에도, 중국 지도부가 전략적 위협으로 인지하는 근본적 이유는 사드에 대해 미국과 인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사드 자체가 중국의 억지력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다고 여겨 전술상(Tactically) 방어적일지라도, 핵전쟁 시 대응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전략상(Strategically) 공격 무기로 간주한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방어적 조치(Defensive Measure)이자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며 중국의 위협 인식을 일축하고 있다(Cantelmo 2016). 특히 미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에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 그 핵심 원리는 동맹국을 향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동맹국의 방어 능력과 통신 시설을 이용해 도전국의 도발을 단념시키는 데 있다(Clinton, 2011).

2. 사드의 기술적 위협 인식과 불용론

한국의 사드 배치 논의 후, 중국은 사드의 기술적인 탐지 능력에 대해 지속해서 반대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것을 전략적 위협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 사드가 한국에 실전 배치되지 않아 그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중국은 무엇 때문에 한국의 사드 배치를 위협으로 인식해 불용론을 제기하는 것일까?

첫째로 중국은 사드의 AN/TPY-2 레이더가 잠재적으로 미국 본토를 향하고 있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지할 수 있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대폭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Denmark 2017). 특히 아시아 중심을 향해 있는 사드의 광범위한 X-Band 레이더가 중국의 황해(黃海), 화동(華東), 동북(東北) 일대의 중국군을 감시할 수 있어 중국의 전략이 미국에 노출됐다고 보고 있다(祁昊天 2016, 15; 张涵 2016; 張相國 2016, 55). 둘째로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미사일을 탐지하자마자 1,000km 범위의 중국군 동향 역시 수집이 가능해, 자국의 전략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Lee 2016, 35). 셋째로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작고 이동이 용이해 중국 쪽으로 레이더를 향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은 1,500km 탐지 범위의 TPY-2 레이더가 미 대륙을 향해있는 대부분의 중국 전략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으며, 평시 보하이만(渤海灣)을 포함해 모든 연해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추적·탐지할 수 있다고 여긴다(Wu 2016).

일반적인 레이더의 원리는 고주파 전자기 파장을 방출한 후 비행체에 맞아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 위치, 이동 경로, 속도 등을 탐지한다. 파장이 짧을수록 탐지 거리가 짧아져 정밀한 탐지가 가능하지만, 파장이 길면 원거리 탐지가 가능한 대신 정밀성이 떨어진다. 사드의 X-Band 레이더는 초고주파 레이더로 후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탄두와 기만체(Decoy)를 탐지해 목표구분이 가능하다고 여겨, 중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가장 큰 도전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를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확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감시할 수 있어 전시에 중국의 전략을 약화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사드가 소규모 미사일 방어체계라 할지라도 중국의 핵 억지력을 상쇄할 것으로 본다(Wu 2016). 반면에 리빈(Li Bin 2016)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대부분이 동북이 아닌 타지역에 배치됐으며, 사드 레이더가 남중국해에 있는 잠수함 핵탄두 미사일까지 탐지할 수 없다며 중국의 주장을 일축한다.

이론상 사드 레이더가 중국 동북부를 날아가는 미사일의 앞부분을 비쳤을 때 단면이 작아 식별이 어렵지만, 뒷부분을 탐지할 때 단면이 넓어 식별이 용이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드 레이더는 미사일의 어느 면을 비추든지 구분하기 힘든 미세한 점으로 보이므로, 분석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사드 레이더의 탐지 방향에 따라 사드가 위협적이라는 중국 측 주장은 적실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다음의 기능적 측면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사드는 탄도미사일 재도입 단계에서 탐색하고 격추되도록 설계돼 장거리 미사일 저지에 적합하다. 즉 서울-평양 거리가 194km에 불과해, 북한이 발사하는 저탄도미사일은 그 효력이 상실돼 한국 방어에 부적합하다(Lee 2016, 35; 祁昊天 2016, 18-19). 또 한국에 배치된 그린 파인(Green Pine) 레이더는 한반도 전역을 탐지

할 수 있지만, 사드는 남부 일부만 보호할 수 있어 장거리(Long-Range) 레이더의 배치가 한국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Liu 2015, 141). 근본적으로 중국은 사드 레이더 사정거리가 1000-2000km며 한반도 지정학적 한계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어막으로 설계됐기에, 사드가 북핵 방어 이상의 목적을 위해 배치된다고 여긴다(Zhong 16/10/01). 둘째로 중국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에 사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Zhong 16/10/09). 셋째로 지정학적으로 사드는 한국보다 일본 서쪽 연안에 배치하는 것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부합되며, 북한 미사일 방어 목적으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지적한다. 넷째로 미국은 아태 지역 미사일 방어체제의 일환으로 일본, 호주에 이미 사드를 배치했으며,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춘 33대의 이지스(Aegis)함 중 1/3을 이 지역에 배치했기 때문에 사드 불용론을 주장한다(祁昊天 2016, 15). 이에 대해 치하오텐(祁昊天 2016, 18-19)은 터키의 경우 사드를 배치해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동남부 일부만 방어할 수 있었다며 사드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대신에 이지스함의 SM-3 Block 2A를 이용해 터키는 물론 유럽 전체의 미사일 방어가 가능했듯, 한국 역시 비용 면에서 사드가 불필요하다는 논리 폈다.

그렇지만 중국 지도부는 사드가 한국의 필요와 무관하게 미국의 세계 미사일 방어체제의 일환으로 한국 배치를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³⁾ 또 이들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전략적 역지력이 약화되고 미·중 미사일 군비 경쟁을 일으켜 아태지역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 것을 우려한다.

이런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중국 전역을 탐

3) 미국의 세계 미사일 방어체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 전략 사령부가 전 세계 미사일 방어계획, 배치, 행동을 일관되게 조정한다. 둘째로 미사일 방어국(Missile Defense Agency)이 모든 미사일의 연구개발을 한다. 셋째로 지역 사령부, 특히 유럽과 태평양, 중앙 사령부가 주축이 돼 역내 미사일 방어를 책임진다(祁昊天 2016, 14).

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드 종말 탐지 시스템(Terminal Monitoring System)을 배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중국 국방부의 양위쥘(杨宇军)은 “이것은 사드 문제를 완전히 아는 이들의 매우 쉬운 기술적 구실로 볼 수 있다”며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China Military Online 16/07/28). 나아가 인민해방군 소장 출신 펑광첸(彭光谦)은 사드를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항 수단을 이미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중국 군사전문가 송중핑(宋忠平) 역시 중국군은 사드 레이더에 대항해전과 방해 혹은 직접적인 에너지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며 상기 사실을 뒷받침한다(Denmark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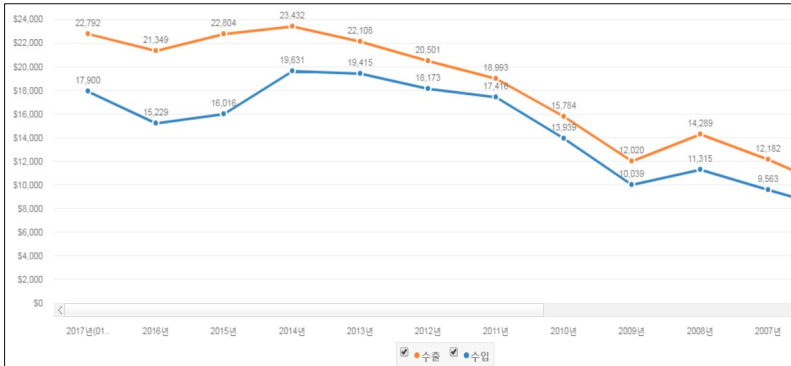
3. 중국의 대한국 경제 강압(Economic Coercion)과 손실

현대 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경제 제재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8.5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손실은 당해 한국의 명목 GDP의 0.5 퍼센트에 해당한다. 동시기 중국의 손실은 최대 1.1조로 추정돼 한국보다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다(China Daily 17/09/20; 한재진, 천용찬 2017, 7-8).

하지만 스나이더(Scott Snyder)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제재는 제한적이고 전략적 이익 측면에서 중국에 오히려 역효과(Counterproductive)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국 역시 한국에 상응하는 손실을 전망했다(Snyder 2016). 중국은 한국에 편중된 중간재 수입에 의존하며 가공무역 중심의 교역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일방적인 대한국 경제 제재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자국경제 역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중 사드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던 2016-2017년 사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 1>을 보면, 도리어 2017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2,292억불로 전년도

21,349억불보다 오히려 6.8% 증가했다. 이런 사실은 중국 지도부가 자국의 경제 손실을 우려해, 사드 갈등 이후 실질적 대한민국 경제 제재가 미약했음을 방증한다.



〈그림 1〉 2007-2017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단위 : 억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2017. “2007-2017 중국 무역통계.” 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검색일: 2018. 1. 25).

중국 지도부는 1990년대까지 경제 성장을 군사력의 기반으로 보았으며, 국가의 힘을 증대하기 위해 장기간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 경제 발전에 집중했다(Sutter 2005, 69).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성취한 중국은 주변국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비공식적인 경제 제재를 시작으로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전개해 왔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 발전이 가속화된 90년대에 접어들어, 중국 지도부는 제재국에 무력 수단보다 경제적 압박을 가해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해 왔으며 이것을 정당한 외교 수단으로 여겨왔다. 이를테면, 노르웨이(Norway)가 달라이 라마(Dalai Lama)와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자 중국은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또 중국은 일본과 댕오위다오(釣魚島) 분쟁에 대해 도요타, 혼다, 닛산 불매 운동을 벌

였다. 이어서 2016년 7월 중국은 남중국해(南中國海) 국제 판결에 불복하며 필리핀과 미국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며 보복 무역 행위를 해왔다(Huang 2 Apr 2017).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행위는 국제 규범과 합리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상외교 이면에 자국의 의도와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비정상적인 외교정책인 셈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수용하는 한국의 특정 지방 자치 단체를 비난하고 한국에 기반을 둔 기업 및 서비스 공급자를 제재했다. 중국은 한국과 사회·경제 교류를 단절해 특정 기업의 제품을 더는 중국 시장에 진입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Haggard 2017).

하지만 경제력을 매개로 상대국을 압박하는 중국의 대외 정책은 다음의 이유로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첫째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시장경제 지위 획득을 원했던 자국의 계획에 장애가 될 것이다. 둘째로 중국이 한국에 경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양날의 검이 돼 자국 역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셋째로 중국의 경제 보복 대상 국가들은 타국으로 대체 공급 업체를 모색할 것이고, 중국에 경도됐던 경제 방향 역시 재조정할 것이기에 중국의 경제 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로 중국의 빈번한 경제 제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위협과 불확실성을 심어줘 중국의 투자 환경을 저해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대외 정책은 타국이 중국과의 미래 관계를 재고하게 만들 것이다(Huang 2 Apr 2017).

Ⅲ. 한국의 사드 배치와 중국의 강압외교 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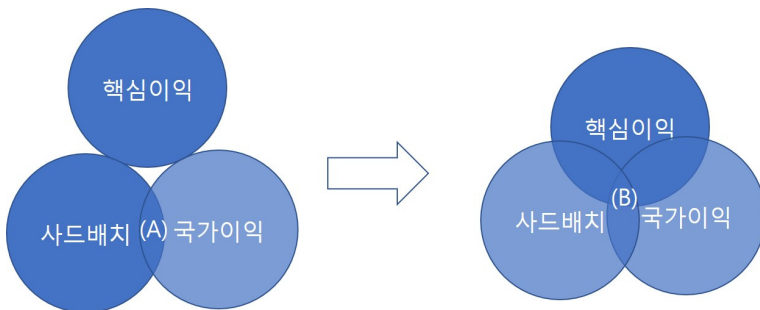
1. 양보할 수 없는 중국의 핵심이익(核心利益) 침해

중국 지도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얼마나 위협적으로 인지하

고 있을까? 앞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약화를 주요 위협으로 들었다. 이 절은 중국이 국가이익으로 규정 한 한국의 사드 배치와 핵심이익 침해의 개연성 여부를 규명하겠다.

중국은 2010년 베트남, 필리핀과 남중국해(南中國海)에서 영토분쟁을 벌이면서 이 지역을 핵심이익으로 규정했다. 이어서 중국 지도부는 일본과 분쟁 중인 다오위다오(釣魚島) 역시 핵심이익으로 규정하면서, 핵심이익 자체를 중국 내부 문제에서 동아시아의 영유권 문제로 확장하기 시작했다(Campbell 2013, 3). 그간 중국정부는 타국과 협력을 강조할 때 민감한 문제의 회피를 전제했지만, 해양 분쟁만은 중국의 영역으로 간주해 그 민감성의 범위를 넓혀왔다(Tan 2015, 62). 중국은 과거 타이완(臺灣) 통일, 티베트 독립, 신장(新疆) 지역 인권 문제에 한정했던 핵심이익을 유연한 개념의 국제문제로 확장한 것이다(Campbell 2013, 3). 그러면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한 것일까?

실제 아래 <그림 1>을 보면 한국의 사드 배치 논의 이후,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국가안전이익(國家安全利益)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핵심이익에 근접한 국가이익(A)으로 규정하며 매우 민감한 반응을 표출해 왔다(Irish 16/02/12; 新華社 16/02/13).



<그림 2> 사드 배치와 핵심이익의 개연성

현실주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중 간 안보 딜레마를 촉발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 주변국의 무장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런 현상은 역내 패권 확보를 향한 중국의 대외전략 균열로 이어져, 국가안보 위협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어샤이머(Mearsheimer 2001)의 “살아남지 않으면 번영할 수 없다”는 주장처럼 안보는 언제나 경제 이익보다 우선하기에, 중국 지도부는 한·중 상호의존으로 파생된 경제 이익을 뒤로하고 자국의 안보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지도부는 핵심이익이 아닌 국가이익으로 규정한 사드 배치 문제에 왜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표출하는 것일까? 바로 중국 핵심이익이 대한국 전략에 포함될 단초를 사드 배치로 인한 대타이완 전력 약화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 안정을 대외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핵으로 인한 한국의 사드 배치가 일본, 타이완 등 인접국의 핵 억지를 향한 무장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지해, 이것이 대타이완 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Nanto & Manyin 2011, 8). 동일 선상에서 미 국방부장관 매티스(James Mattis)는 2017년 초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군사 대응과 동북아 군비 경쟁이 유도될 것을 우려했다(Harrison 2017). 이에 대해 우루치양(吳日強)은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력 향상으로, 중국은 약화된 전략을 안정·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핵무기를 구축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Wu 2016). 나아가 중국은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국제 체제의 힘의 균형과 안정을 훼손해, 주변국의 핵 군축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여긴다(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11).

특히 중국 지도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 자체를 미국의 군사 개입으로 인지해, 타이완 해협에 대항해 있는 중국의 미사일 능력을 약화한다고 여긴다. 이런 사실은 일찍이 2008년 미·중 외교 안보 대화에서 드러났다. 중국 외교부는 미사일 방어 기술이 타이완까지 확산되면, 자국의

타이완 방어 미사일 기술 역시 제고될 것을 우려했다(U.S. Embassy in China 2008). 이런 면에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타이완까지 확장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편입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며, 중국에는 위 <그림 2>의 핵심이익(B)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국가이익으로 규정한 사드 문제에 대해, 무력 대응보다 경제적 강압을 감행했다는 점도 핵심이익 규정 뒤의 행태와 유사하다. 실제 중국은 핵심이익을 무력 충돌도 감행하겠다는 개념으로 정의했지만, 1988년 3월 난사군도(南沙群島) 해역 츠과자오(赤瓜礁)에서 중·월 간 무력충돌 이후, 단 한 차례의 무력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Guan 2000, 203-204). 이에 대해 예르텐(Jerdén 2014, 87)은 중국의 공세성(Assertiveness)은 특정 담론의 간주관적 지식의 범주 내에만 존재하며, 이 담론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존스톤(Jhonston 2013, 46-48) 역시 중국이 공세적이라는 관념은 온라인 미디어와 외교정책 블로그(Blog)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터넷 기반의 언론으로 말미암아 급속히 확산된 현상으로 보고 있다.

대신 중국은 2002년 후진타오 시기부터 상대국과의 갈등 상황에 봉착했을 때 핵심이익을 제기하며 냉혹한 경제 보복을 전개한 바 있다. 2006년 프랑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와 달라이 라마(Dalai Lama) 회동을 앞두고, 중국정부는 정상회담은 물론 에어버스(AirBus) 수입 계획을 전면 철회해 프랑스에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 또 중국은 2010년 일본과 다오위다오 분쟁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해 심각한 경제 보복을 가했다. 여기서 공통점은 중국 지도부가 핵심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군사력을 이용한 물리적 공세를 취하기보다 경제적 제재를 가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와 유사하다.

2000년 6월 중국은 한·중 간 마늘 분쟁을 말미암아 한국의 폴리에틸렌(Polyethylene)과 휴대전화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강하게 한국 경제

를 압박했다. 다행히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더불어 회원국 사이 보복 조치와 무역 분쟁 관리 지침에 따라야 했기에 한·중 경제 갈등은 봉합될 수 있었다(Snyder 2009, 65-67). 이런 점에서 경제발전이 가속화된 2000년대에 접어들어 중국은 국가 안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상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며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음을 알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부강한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무역 분쟁을 정치 영역으로 부각해 갈등 대상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안보문제를 거친 경제 보복으로 응수해 왔다.

2. 동아시아의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와 중국의 패권 약화

시진핑 시기에 접어들어 중국은 미국과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 전략적 보증(Strategic Reassurance) 관계의 논의가 오갔지만,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이익과 가치가 상이해 양국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틀(Framework)에 이르지 못했다(Tow & Limaye 2016, 20). 그간 중국 지도부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패권 확보를 광범위한 전략 목표로 삼아, 역내 동학을 주도했던 미국의 능력을 제한해 한·미 동맹 약화를 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동북아 지역의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됐다고 여기며, 역내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한국 탓으로 돌리며 비난하고 있다. 또 중국은 사드 자체를 실질적 군사 위협에 따르는 전략적 대치라기보다 중국 뒷마당에서 미국의 지속된 힘의 표출로 인지한다. 이것이 사드가 중국에 치명적인 군사 위협이 없음에도 중국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다(Denmark 2017).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해,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크게 훼손한다고 인식한다. 앞서 언급했듯, 중국

은 사드 레이더가 한반도 방어에 필요 이상으로 넓어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악화하기에 위협적으로 여긴다(PRC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ebruary 2016, 12-13; Wu 2016). 나아가 한국이 사드 배치를 매개로 미국이 구상한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체계에 동참해,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으로 전환될 위험성은 중국 지도부에 중대한 안보이익 침해로 인식된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전략적으로 중국에 균형을 맞추려는 미국의 노력에 한국이 전폭적으로 지지했음을 의미한다 (Swaine 2017, 5). 더욱이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군 주둔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중국은 불편함의 표시로 한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Lee 2016, 35).

그간 중국은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우위를 선점하며 자국 중심의 지역 안정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의 기술 발전에 맞서 중국의 핵전략과 미사일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Sutter 2005, 69). 또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힘의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이 지역의 전역미사일방어(Theater Missile Defense) 체계의 개발과 시행을 저지해 왔다(Sutter 2005, 69-70). 이런 사실은 아태 지역의 적대적 패권 점유를 막고 개방적인 지역 무역 체제를 구성하려는 미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과 상충된다(Green, 2015).

3. 중국식 국제질서를 어긴 한국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공식적인 이유는 ①미·중 간 전략적 신뢰 훼손, ②지역 긴장 가중, ③새로운 군비 경쟁 유발로 인한 지역 안보 침해로 집약된다(Tao Zhang, 2016). 그렇다면 그 이면에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공세적 대한민국 정책을 전개하는 실질적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한·중 수교 후 양국은 ‘서로 다른 건 놔두고 같은 것을 추구하자’는 구존동이(求存同異)를 지향하며 최대의 발전을 맞았지만, 사드 배치 결정은 양국 관계의 변곡점이 됐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는 사드 자체가 중국의 역내 안보 약화를 초래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중국이 제시한 국제 질서를 한국이 어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국식 국제질서란 유교적 관념을 국제정치에 투영한 것을 의미한다. 아편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 경제의 1/3을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었으며, 주변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형성해 호혜적 관점에서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청나라 패망 후 생존 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서구 열강의 국제정치 질서에 문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더 이상 고수하기 힘들었다. 이후 2000년대 중국이 부강한 강대국으로 재부상하면서 중국인의 관념에 잠재됐던 중화사상(中華思想)이 중국식 국제정치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중국 지도부는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규정한 국제 질서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국익을 떠나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경로의 의존적(Path Dependence) 대외 정책을 구사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1979년 2월 17일 공산국가 사이에 발발한 중·월 전쟁을 들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처럼 자국의 전략적 위협이 아닌 ‘베트남 화교(華僑) 탄압에 대한 교훈(Lesson)’을 명목으로 베트남을 침공했다. 중국은 베트남의 영토 획득 목적이 아닌 징벌이라고 공언하며 개전했다. 3월 16일까지 한 달간 수행된 중·월 전쟁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적 구실 없이 침공한 최초의 전쟁이었다(Jencks 1979, 801). 실제 중국은 1969년 3월 이데올로기 문제로 소련과 국경 분쟁을 벌인 바 있다. 결과적으로 덩샤오핑은 이 전쟁에서 패배할 줄 알면서도, 베트남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규범과 질서를 어겼다는 이유로 침공을 강행했다.

하지만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중국은 강대국과 연루된 국제 문제에

대해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 세력전이 이론에 따르면, 중국처럼 부상하는 강대국은 불가피하게 국제 체제의 현상유지에 도전해 힘과 정치적 긴장을 조성해 국제 질서에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중국은 강대국의 위계질서 내에서 자유주의와 타협하며 부상하고 있다(Zhang 2016, 816).

그간 중국은 대외정책 측면에서 자국 중심의 국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행위자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중국적 힘의 역할로 규정해왔다(Easley & Park 2016, 667). 이런 맥락에서 중국 지도부는 북-중 관계의 현상유지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북한을 포용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더 많다고 결론지었다(Zhu & Beauchamp-Mustafaga 2015, 37-64).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은 호혜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 북한을 감싸왔다. 실제 북핵 위기가 발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 포기 설득에 실패했다. 이런 북한의 행동은 미국에 중국이 우려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빌미가 돼 한-미 동맹 강화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의 안보 이익은 약해졌다(Xiao 2017, 87). 이처럼 중국 지도부는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이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존재라 여겨 감싸왔다. 중국 지도부는 김정일 사후 2012년 4월과 12월 로켓 발사를 김정은의 정권 강화 차원이라 이해했으며, 중국이 정의하는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여겼다. 그렇지만 2013년 2월 12일, 3차 북핵 실험부터 북한이 명백히 중국식 규범을 어겼기에 중국의 정치 엘리트와 인민은 분개했다. 중국 지도부는 북한이 중국의 권위를 어기고 중국이 제시해온 안정 개념을 위협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Easley & Park 2016, 656-667).

실제 2차 북핵 실험 직후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연이어 방북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3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동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3차 북핵실험

직후 중국 지도부는 고위급 인사의 방북 중단은 물론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중국은 2015년 10월 리우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政治局常務委員)을 북한 70주년 행사에 보내 구색만 맞췄다. 급기야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단행 직후,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UNSC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2270 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 중국은 북·중 모두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기에 상호 간 강한 연계보다 일반 관계(Normal Relationship) 유지를 원했다(Xiao 2017, 83-84).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자체가 국제 규범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유지에 장애 요소며 한국은 오랜 기간 중국이 구상한 역내 질서의 틀을 깬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은 감정적인 면에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 위기 시 한국은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며 양보해왔다. 하지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을 한국에 부여했음에도, 한국은 기존 입장을 견지해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적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중국 지도부에 심어줬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얻는 손익은 아래 <표 1>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표 1> 한국의 사드 배치와 중국의 손익

중국의 결정	이익	손실
사드 배치 용인	한·중 관계 현상유지	동북아 지역의 중국 전력 약화
사드 배치 반대	중국 규범의 국제 질서 천명	한·중 관계 악화, 동북아 지역의 중국의 영향력 약화

위 <표 1>을 분석하면,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한·중 관계 악화는 물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역내 주도권이 약화될 수

있음에도, 중국식 국제 질서 천명을 이익으로 간주해 대한민국 경제 제재를 강행했다고 판단된다.

VI. 맺음말

이 연구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어떤 동인으로 대한민국 강압외교를 전개했는지 규명했다. 일국의 외교정책은 국제 체제와 국내 행위자가 상호작용하며 도출된다. 사무엘 킴(Samuel S. Kim)이 중국 외교정책을 어떤 가치 혹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 행위자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행위와 합목적적 대외활동의 총합이라 정의한 것처럼(Kim 1998, 11), 동북아 지역의 세력전이에 따른 국제 체제 변화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역동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내 정치 환경과 반응하며 중국의 대외정책으로 표출됐다.

구조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외교정책결정은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보다 객관적 구조를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6.25 참전, 중·소 분쟁은 압도적 힘의 차이가 있는 강대국을 대상으로 감행한 모험이기에 구조적 현실주의를 적용해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 또 1962년 중·인 전쟁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군사 우위에도, 더는 인도의 국경지대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협상으로 마무리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시기 마오쩌둥이라는 행위자의 인식과 선택이 국제질서와 상호 작용해 대외정책으로 표출됐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대외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외교정책이 결정된다는 구조적 현실주의 관점보다 국내 정치 행위자의 판단이 외교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쳐왔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추진에 따른 중국의 대외정책은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국제 환경 이외에 시진핑 일인의 주관적인 의도가 반영된 것임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2000년대 중국이 부강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역내 영향력 약화를 우려한 미국이 ‘아시아의 회귀(Pivot to Asia)’ 선언 후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 상호의존 그 자체만으로도 중국 지도부에 심리적 안정감을 줬으며, 양국은 유례없는 밀월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4차 북핵 위기로 파생된 한국의 사드 배치 논의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가져왔고 동북아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것은 곧 역내 중국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지기에 중국은 한국을 탓하며 맞공세에 들어갔다. 현실주의의 기본 가정처럼 국가가 단일하고 합리적 행위자라면, 중국은 세력전이의 국제 체제 수준에서 한국을 포용해 한·미·일 동맹 강화를 저지해야 하지만, 전략적으로 한국을 잃을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경제적 강압을 견지하고 있다. 또 중국의 대한민국 경제 제재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국의 경제 손실 역시 감수해야 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점진적으로 구축된 한·중 경제적 상호의존은 양국이 갈등에 직면했을 때, 상호 간 충돌 비용이 높아 일국만 피해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중국 지도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응해 공세적인 대한국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기능적, 기술적 불용론,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 약화 등을 제시하며 반대 의사를 공언해 왔다. 대안으로 중국은 북핵에 대응해 한국을 보호할 사드 대체제가 이미 존재하기에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 사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전략적 위협보다 이것이 미국의 지속된 힘의 표출로 인지하기에 한국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그렇다면 실제 중국은 어떤 동인으로 대한국 봉쇄전략을 전개한 것일까?

우선 중국 지도부는 사드 문제를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에 근접한 국가이익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가 사드 자체를 핵심이익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핵심이익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바

로 북핵 위기를 명분으로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묵인했을 때 타이완까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확산돼, 중국의 대타이완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그 자체로 중국식 국제질서를 어겼다고 간주해, 한·중 간 정치·경제적 실익을 뒤로하고 경제적 강압으로 한국에 응수했다. 한국이 강행한 사드 배치 결정이 국제질서에 위배되진 않았지만, 중국 지도부는 명백히 중국식 규범의 틀을 깬 것이라 여겼다. 사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 위기 시 한국은 항상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며 타협점을 찾아왔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을 한국에 부여했음에도, 한국은 기존의 입장을 견지해,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적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중국 지도부에 심어줘 이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마지막으로 중국 지도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편입으로 여겨 중국의 전략적 균형이 크게 훼손된다고 인식해 대한민국 강압외교로 응수했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사드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으로 확장될 위험성을 중대한 안보이익 침해로 여겨 한국의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했다.

이처럼 중국 지도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 자체를 대타이완 전력약화, 중국식 규범 위배, 전략적 균형 훼손으로 간주해 한·중 관계 훼손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대한민국 강압외교를 전개했다고 판단된다.

투 고 일: 2018년 6월 30일

심사완료일: 2018년 7월 19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13일

참고문헌

- 서진영. 2017. “韓·中 수교 25년 회고와 전망.” 『문화일보』(8월 25일).
- 한국무역협회. 2017. “2007-2017 중국 무역통계.” 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검색일: 2018. 1. 25).
- 한재진·천용찬. 2017. “현안과 과제: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17(10): 7-8.
- 祁昊天. 2016. “薩德入韓與美國亞太反導布局的戰術與戰略考量.” 『現代國際關係』7: 13-21.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11. “2010年 中國的國防.”
- 張相國. 2016. “美在韓部署 薩德 分析.” 『兵器知識』 4: 54-57.
- Altfeld, Michael F. 1984. "The decision to ally: A theory and test."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7(4): 523-544.
- Cantelmo, Robert. 2016. “THAAD Could Spark a Dangerous Arms Race in East Asia.” *The Diplomat*. July 22.
- China Daily*. 2017. "THAAD may lead to \$7.5b economic loss in 2017: South Korean media." Sep. 20.
- China Military Online*. 2016. “Defense Ministry's regular press conference.” July 28.
- Clinton, Hillary. 2011.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Oct. 11.
- Denmark, Abraham M. 2017. "China's Fear of U.S. Missile Defense Is Disingenuous." *Foreign Policy*, March 20.
- Dzodin, Harvey. 2017. Chinese Dream is well on its way to becoming reality. *China Daily*. Oct. 10.
- Easley, Leif-Eric & In Young Park. 2016. "China's norms in its near abroad:

- understanding Beijing's North Korea polic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5(101): 651-668.
- Green, Michael J. 2015. *U.S. defense policy issues pertaining to the Asia-Pacific theatre*. Washington. Apr. 14.
- Guan, Ang Cheng. 2000. "The South China Sea Dispute Revisited."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4(2), 201-215.
- Haggard, Stephan. 2017. "China, South Korea, the U.S. and THAAD." *China Policy Institute: Analysis*. Jan. 30.
- Harrison, Bruce. 2017. "Mattis Pumps up THAAD, But China Likely to Keep 'Bullying' Korea." *The Diplomat*. Feb. 3.
- Irish, John. 2016. "China urges U.N. action to make North Korea 'pay price'." *Reuters*. Feb 12.
- Jencks, Harlan W. 1979. "China's Punitive War on Vietnam: A Military Assessment." *Asian Survey* 19(8): 801-815.
- Jerdén, Björn. 2014. "The assertive China narrative: Why it is wrong and how so many still bought into it."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7(1): 47-88.
- Johnston, Alastair Iain. 2013.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37(4): 7-48.
- Lee, Brianni. 2017.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Militarism Leading To Political Regression."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38: 34-37.
- Li, Bin. 2016. "The Security Dilemma and THAAD Deployment in the ROK." *Kyunghyang Daily*. Aug. 3.
- Mearsheimer, John J.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W Norton & Company.
- Papayoanou, Paul A. 1997.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the balance of powe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1(1): 113-140.

- PRC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6. "Wang Yi Meets with Foreign Minister Yun Byungse of ROK." Feb. 12.
- _____. 2016. "Wang Yi Talks about US's Plan to Deploy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in ROK." Feb. 13.
- _____. 2016.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Hong Lei's Regular Press Conference." March 30.
- Rothstein, Robert L. 1988. *Alliances and Small Powe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nyder, Scott A. 2009. *China's Rise and the Two Koreas: Politics, Economics, Security*. Lynne Rienner Pub.
- _____. 2016. "China's Limited Retaliation Options Against the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ugust 8.
- Swaine, Michael D. 2017. "Chinese Views on South Korea's Deployment of THAAD." *China Leadership Monitor* 52: 1-12.
- Tow, William T & Satu Limaye. 2016. "What's China Got to Do With It? US Alliances, Partnerships in the Asia Pacific." *Asian Politics & Policy* 8(11): 7-26.
- U.S. Embassy in China. 2008. "U.S.-China Security Dialogue Working Lunch: Strategic Security, Missile Defense, Space, Nonproliferation, Iran." June 13. www.telegraph.co.uk/news/wikileaks-files/china-wikileaks/8299322/U.S.-CHINA-SECURITY-DIALOGUE-WORKING-LUNCH-STRATEGIC-SECURITY-MISSILE-DEFENSE-SPACE-NONPRO-IRAN.html(검색일: 2017. 12. 31)
- Wu, Riqiang. 2013. "China's Anxiety About US Missile Defence: A Solution." *Survival* 55(5): 29-52.
- _____. 2016. "South Korea's THAAD: Impact on China's Nuclear Deterrent." *RSIS Commentary* 192. July 27.

- Xiao, Ren. 2017. "Old Wine in a New Bottle?: China's Korea Problem." *Asia Policy*. 23(1): 83-89.
- Yi, Whan-woo. 2017. President walking tightrope between US and China. *Korea Times*, July 9.
- Yonhap News. 2017. "Jeju Air gets China approval to fly 2 chartered flights" July 17.
- Zhang, Tao. 2016. "PLA Daily: U.S., ROK must stop deployment of THAAD missile battery." *China Military Online*. July 29.
- Zhang, Yongjin. 2016. "China and liberal hierarchies in global international society: power and negotiation for normative change." *International Affairs* 92(4): 795-816.
- Zhong, Sheng. 2016. "Directed Against China: New Site for U.S. THAAD Missile Deployment in South Korea." *People's Daily*. Oct. 1.
- _____. 2016. "US, ROK will pay price if persisting in THAAD deployment." *People's Daily*. Oct. 9.

Abstract

China's Coercive Diplomacy on South Korea's Deployment of THAAD

Kim, Jinyong

Kyungnam University, Dept of Political Science & Int'l Relations

In response to South Korea's decision to station THAAD, the U.S. anti-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in the wake of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in early 2016, China began to take retaliatory actions, unilaterally destroying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Since then, China has been put at risk of losing South Korea in strategic and economic aspects. If the Sino-Korean relations had been maintained at status quo at that time, it could have most likely served as a mechanism to break the strategic balance of power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urrounding Northeast Asia, thus accelerating the power transition. This would have brought considerable strategic benefits to China. Furthermore, China's economic retaliation will likely cause damage to its economy, given the high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being so, why has the Chinese leadership adopted a strategy of coercive diplomacy against South Korea? This paper has shed light on the motives of China's offensive post-THAAD foreign policy towards South Korea, drawing

on the above-mentioned problem awareness.

Keywords: THAAD, Sino-Korean Relations, Chinese Foreign Policy, Coercive Diplomacy, Core Interests